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7월 개원 '산 넘어 산'

주청사 소재지·원 구성 등 현안 산적
즉시 처리 27개·순차 추진 16개 과제
地選 당선자 확정 뒤에야 논의 가능
상당 기간 이원화 체계 운영 불가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개원을 목표로 통합 준비 작업에 들어갔지만 본회의가 진행될 통합의회 소재지 문제부터 원 구성, 필수 조례 처리까지 핵심 현안 상당수가 6월3일 지방선거 이후에야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출범 조차 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통합의회 개원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3주 남짓에 불과한 데다, 의회 조직·예산·청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정상 개원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6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 등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현재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총 43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의회 개원과 임시회 준비, 조직·예산 등 오는 7월1일 즉시 처리해야 하는 '출범과제'는 27개, 개원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 가능한 '운영과제'는 16개로 분류됐다.

시·도의회 실무진은 자치법규 통합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양 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자치법규 자료를 상호 교류한 뒤 입법 검토와 비용 추계를 진행하고 이날 중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6·3 지방선거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자를 대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오는 6월9일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자 간담회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문제는 통합의회 개원 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핵심 현안 대부분이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가 확정돼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회의가 진행될 주청사 소재지와 통합의회

개원식 장소, 의장단·상임위원회 구성 방식 등 모두 당선자들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현재로서는 실무 차원의 준비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임위원회 구성 역시 집행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를 구성하려면 집행부 조직 체계가 먼저 정리돼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직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사 문제도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 통합의회 청사가 결정되더라도 당장 리모델링 공사과 공간 확보 문제가 남아 있어 본회의나 임시회를 즉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 청사 외에 제3의 장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역시 당선자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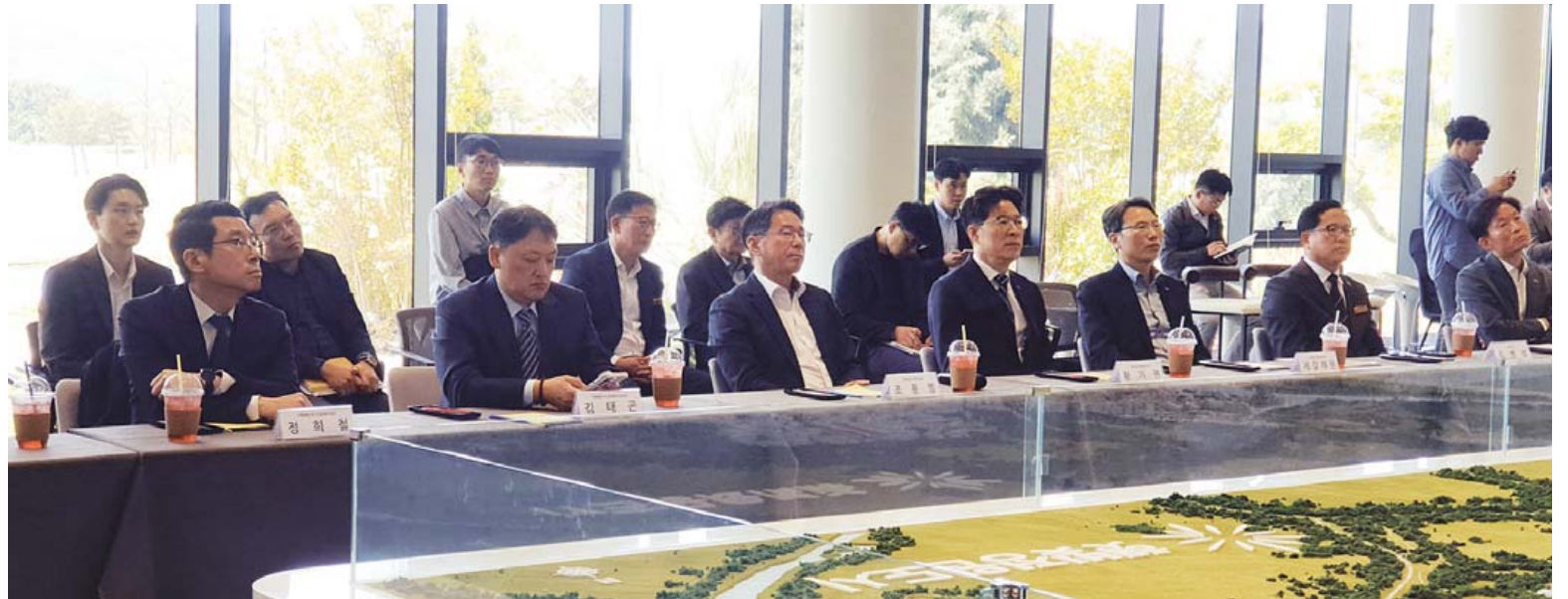
실제 통합의회가 개원하더라도 상당 기간 이원화 체계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여건상 시·도의회 의원, 사무처 인력 전체를 한 공간으로 통합하기 어려워 향후 통합청사가 신축되거나 증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2곳 청사를 병행 사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회 사무처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 역시 난제로 꼽힌다. 현재 예산·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심 현안이 모두 촉박한 일정 속에서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만큼 준비 과정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양 의회가 각각 당선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수준이다. 본회의장을 어디에 둘지, 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 핵심 결정은 결국 당선자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해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6일 해남 솔라시도와 영암 HD현대삼호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기반 AI 산업 현장과 조선업 인공지능 전환(AI)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현안과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AI·조선업 자동화 예산 확보 '쟁걸음'

기획처 예산실장, 솔라시도·현대삼호 방문
태양광 설비·AI 자율운영 조선소 등 건의

전남도가 해남 솔라시도와 영암 HD현대삼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조선업 자동화 분야 2027년 국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해남 솔라시도와 영암 HD현대삼호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기반 AI 산업 현장과 조선업 인공지능 전환(AI)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현안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용범 실장은 솔라시도에서 기업도시 조성 현황을 보고받고 국가AI컴퓨팅센터 예정 부지와 태양광 발전단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살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솔라시도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국가 AI 인프라와 RE100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뒷받침할 최적지라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은 성공적 데이터센터 조성에 필수적이며 이는 AI 산업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 공동점 설비 구축'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해남·영암 일원 태양광 발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1천933억원이며 전남도는 2027년 국비 483억원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조 실장은 HD현대삼호도 방문해 조선업 AI 자동화 공정 등 조선업 자동화·디지털 전환 현장을 둘러봤다.

전남도는 고숙련 인력 감소, 조선업 인력난, 중국 조선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로봇을 접목한 제조 혁신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AI 자율운영 조선소 혁신거점 구축' 사업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 사업은 대불산단과 대불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선박 제조 공정에 AI와 로봇을 접목해 24시간 자율운영 시스템과 지능형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잠정 3천억원 규모로 전남도는 2027년 핵심 기술개발비 15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구축 실증사업,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버제배능가 퇴적연금 제도 운영 등 주요 국고 건의사업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분권 강화와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등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 /양시원기자

민형배 캠프, 국힘에 개헌안 찬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측 민심캠프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심캠프 대변인실은 6일 논평을 통해 "7일 본회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심판대가 될 것"이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자 전남·광주 시·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민심캠프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선거운 출속

개헌'이라는 역사 논리로 발목을 잡으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특히 이정현 국민의힘 통합시장 후보는 '의원 자율 투표'라는 타협안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힘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심캠프는 "헌법적 가치조차 부정하는 정당이 말하는 전남·광주 발전은 시·도민을 기만하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7일 누가 민주주의의 편에 서고 누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시원기자

김지사,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 종합 점검

전남도와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6일 여수시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박람회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의 안전관리체계와 편의대책, 시설 조성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장 방문 이후 후속 조치로 분야별 준비상황 확인과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도는 자연재해와 인파밀집 대비 안전관리체계, 교통·숙박·음식 등 관람객 편의대책, 행사장 기반시설과 전시시설 조성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태풍·강풍 등 재난 대비와 폭염 대응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현장 대응체계 전반을 확인했다. /양시원기자

김 지사는 이날 박람회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진모지구 주행사장을 방문해 행사장 공정 상황과 도시숲 조성상황 등을 살폈다.

김영록 지사는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태풍·강풍 등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점검과 폭염 대응 등 관람객 편의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박람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

당신은 목적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26. 3. 25. ~ 10. 31.

병의원 관계자
5,000만원

정비렌터카 관계자
3,000만원

차주·운전자·동승자
1,000만원

지금 기준 수사 확정 또는 진행 / 구체적 증거 제공 /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봤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